

## 제 1 주제

# 중앙정부의 녹색뉴딜정책 추진방향과 과제

최 영 국 선임연구위원

(국토연구원)



# 중앙정부의 녹색뉴딜정책 추진방향과 과제

최영국 |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I. 머리말

- 세계는 지금 에너지 기후변화시대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구가에서는 “녹색성장”을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의 실천적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음<sup>1)</sup>
  - 에너지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환경악화는 물론 세계경제경쟁에서 낙오될 상황임. 에너지와 기후변화 문제 대응은 곧 “경제 살리기”와 연관되어 있음
  - 2008년도 석유가스 수입대금은 약 1천억 불을 상회 :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총액은 700억불 정도
  - 에너지 효율을 10%만 향상시켜도 약 100억 불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무역수지개선을 통한 경제 살리기가 가능
- 2013년부터 탄소배출 의무감축국에 강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음
  -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 : 2008년 8월 15일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제시

1) 산업혁명 이후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지구 온난화 문제 심각. 지구 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음. 2000년 모잠비크 및 유럽홍수, 2004년 방글라데시 우기 홍수(전 국토의 60% 침수) 등 지구적으로 집중호우와 폭풍우에 의한 홍수 빈발(UNFCCC, 2005). 2005년 세계적으로 대형 기상재해에 따른 피해규모는 2천 120억 달러로 1990년 대비 4.8배 증가(삼성지구환경연구소, 2008, 믿기 싫은 현실, 기후 대재앙).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 회의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 체결. 1997년에는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을 의무화하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음. 이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및 대응책 마련은 지구적 위기에 공동대응하고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는 한편, 자국의 기후변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됨. 왜냐하면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는 단순히 환경문제가 아니라 인류 생존위기를 가져오는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임

- 녹색성장은 과거의 개발위주의 양적성장에서 벗어나 환경을 보전하면서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임
- 세계는 지금 심각한 경제위기상황에 있음 : 눈앞에 놓인 위기 극복은 존각을 다투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세계 각국들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 및 대규모 실업을 전망하고 있음
  - 2009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보면, 미국 -1.5, 독일 -2.2%, 영국 -2.8%, 일본 -2.7% 등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2)
  - OECD 국가들이 대부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것은 1930년대 이후 처음3)

[표 1] 2009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전년동기 대비, %)

	2008년		2009년						
	4/4	연간	1/4	2/4	3/4	4/4	상반기	하반기	연간
세 계	0.4	2.5	-0.7	-1.0	-0.5	1.0	-0.9	0.3	-0.3
(PPP기준)	1.3	3.4	0.1	-0.2	0.4	1.7	-0.0	1.0	0.5
<선진국>	-1.2	1.0	-2.4	-2.7	-2.2	-0.3	-2.6	-1.2	-1.9
미 국	-0.2	1.3	-1.2	-2.2	-2.0	-0.6	-1.7	-1.3	-1.5
유로지역	-1.2	0.8	-2.8	-2.7	-2.0	0.1	-2.8	-1.0	-1.9
- 독 일	-1.0	1.1	-3.1	-3.0	-2.4	-0.4	-3.1	-1.4	-2.2
영 국	-1.8	0.7	-3.4	-3.6	-3.0	-1.4	-3.5	-2.2	-2.8
일 본	-3.0	-0.3	-3.9	-3.3	-2.9	-0.6	-3.6	-1.8	-2.7
<신흥개도국>	4.4	6.4	2.9	2.8	3.3	3.9	2.8	3.6	3.2
BRIC's	5.3	7.7	4.1	4.6	5.2	6.0	4.3	5.6	5.0
- 중 국	6.8	9.1	7.2	7.8	8.4	8.9	7.5	8.7	8.1
- 인 도	5.0	7.3	4.2	4.4	4.9	6.5	4.3	5.7	5.0
- 러시아	5.7	7.0	-0.2	0.0	0.6	1.6	-0.1	1.1	0.5
- 브라질	1.4	5.1	0.5	1.7	2.2	2.8	1.1	2.5	1.8
ASEAN5	4.1	5.4	1.8	1.7	2.0	2.6	1.7	2.3	2.0
중 동	4.7	6.1	3.7	2.8	2.4	2.2	3.3	2.3	2.8
중 남 미	3.9	4.6	1.5	0.1	1.3	1.7	0.8	1.5	1.2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2009, 2009년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전망

- 각국의 2007년 대비 2008년의 실업률도 크게 증가
- 국가마다 에너지·기후변화에 대응한 녹색성장을 장기 비전을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관련하여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녹색뉴딜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음4)

2) 삼성경제연구소, 2009, 2009년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전망

3) 삼성경제연구소, 2009, 녹색뉴딜사업의 재조명, CEO Information 제691호

4) 2008년 7월 영국의 NEF(The New Economics Foundation)는 'A Green New Deal'이라는 보고서에서 "세계가 금융위기, 기후 위기, 에너지위기 등 3중고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녹색뉴딜' 제시.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도 2008.10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자원 재활용을 포함하는 청정에너지 및 청정기술분야, 바이오

-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장단기 과제를 안고 있는 세계 각국에서는 과거와 달리 환경을 강조한 경기부양대책을 제시하고 있음
  - 2005년 2월 16일 교통의정서가 공식 발효되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고 있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관련 환경산업 및 기술개발을 선점하려는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음
  - 청정에너지 개발 확대 등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 미국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10년간 1,500억 달러 투자, 일본은 향후 5년간 환경비즈니스 시장 규모를 100조엔 이상으로 확대하는 계획 발표
- 현재 우리는 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평소에 생각할 수 없는 역발상,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음과 동시에 그럼에도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녹색성장'을 추진해야 하는 묘한 상황에 놓여 있음
  - 정부에서는 녹색뉴딜사업으로 9개의 핵심사업과 27개의 연계사업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해 비판적 시각과 긍정적 시각 등 다양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
  - 선진국의 녹색뉴딜정책 사례와 국내의 녹색뉴딜정책 및 녹색성장관련 부처별 정책, 다양한 여론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녹색뉴딜사업의 추진 방향 및 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

매스 등 농촌 에너지 분야, 유기농업을 포함하는 지속가능한 농업분야, 개발도상국의 산림훼손 방지사업 분야, 도시계획·교통·친환경빌딩 등 지속가능한 도시사업 분야 등 5대 녹색뉴딜사업 제시(삼성경제연구소, 2009, 녹색뉴딜사업의 재조명, CEO Information 제691호)

5) 기후변화홍보포털(<http://www.gihoo.or.kr/>)

## II. 녹색뉴딜정책 주요 내용

### 1. 정부의 녹색뉴딜사업 및 녹색성장 관련 정책

#### 1) 녹색뉴딜사업 개요<sup>6)</sup>

##### ○ 추진목적

- 녹색(Green)과 뉴딜(New Deal)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잠재적 성장동력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정책으로 승화·발전
- 저탄소·친환경·자원절약 등 녹색성장전략에 고용창출 정책을 융합하여 「녹색뉴딜사업」을 제시하였음. 이 사업은 정부주도의 대대적인 친환경 사업으로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제시된 사업은 주로 녹색과 연관성이 있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 대규모 공공부문 투자사업 중심

##### ○ 사업추진분야

- 에너지 절약, 자원재활용 및 청정에너지 개발 등 자원절감형 경제 구축 사업
- 녹색 교통망 구축, 맑은 물 공급 등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
- 탄소 저감, 수자원 확보 등 지구 장래와 차세대 안전을 위한 선제적·예방적 사업
- 산업·정보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등 미래대비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사업

##### ○ 사업내용

- 9개 핵심사업 : ① 4대강 살리기 및 주변 정비사업, ② 녹색 교통망 구축, ③ 녹색국가 정보인프라 구축, ④ 대체 수자원 확보 및 친환경 중소댐 건설, ⑤ 그린카·청정에너지 보급, ⑥ 자원재활용 확대, ⑦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6) 기획재정부 외(2009)에서 발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New Deal 사업 추진방안(국무회의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하였음. 또한 지식경제부에서 제시한 신성장동력육성방안도 녹색뉴딜정책에 포함하였음

화, ⑧ 에너지 절약형 그린홈·오피스 및 그린스쿨 사업, ⑨ 쾌적한 녹색 생활 공간의 조성

- 27개 연계 사업 : 핵심사업 4대강 살리기 및 주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연계 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 클린코리아, 수변구역 녹색화 등 추진, 각 핵심 사업별 3개 연계사업 추진

[표 2] 한국의 녹색뉴딜 사업

핵심사업(9)	연계사업(27)
① 4대강 살리기 및 주변 정비 사업	① -1. 재해위험지구 정비 ① -2. 클린 코리아 ① -3. 수변구역 녹색화
② 녹색 교통망 구축	② -1. 환승시설 구축 ② -2.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② -3. 전국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구축
③ 녹색국가 정보인프라 구축	③ -1.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③ -2.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③ -3. 도로기반지하시설물 전산화
④ 대체 수자원 확보 및 친환경 중소댐 건설	④ -1. 해외의 댐 개발 및 광역상수도 사업에 적극 진출 ④ -2. 해수담수화 ④ -3. 하수처리수의 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
⑤ 그린카·청정에너지 보급	⑤ -1. 그린카 독자기술력 조기확보 ⑤ -2. 바이오 에탄올 ⑤ -3.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ETBE 시범 보급
⑥ 자원재활용 확대	⑥ -1. 초본계·해양계 등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⑥ -2. 바이오매스 활용 및 가축분뇨 자원화 ⑥ -3. 매립지 정비 및 개발
⑦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⑦ -1. 재해예방 및 훼손산림 복원 ⑦ -2.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시설 지원 ⑦ -3. 테마공원 조성
⑧ 그린홈·오피스 및 그린스쿨 사업	⑧ -1. 공공시설 조명 LED조명으로 교체 ⑧ -2. 그린 IT 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⑧ -3. 그린홈닥터 양성
⑨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의 조성	⑨ -1. 건축물 옥상 및 벽면 녹화 사업 ⑨ -2. 친환경 도로 조성 ⑨ -3. 소규모 유흥시설의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으로 활용

\* 3월 8일자로 사업 일부 변경

- 그린홈·오피스 구축(핵심) : 기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중복, 부처 간 협의 후 추진
- 그린포트(GREEN PORT), 경전철 구축 : 연계사업 추가
- 해외물산업 진출, 해수담수화기술개발, 건물녹화사업, 에코로드 조성 : 연계사업 삭제

- 재정투입규모
  - 투입기간 : 2009년 ~ 2012년
  - 총 사업비 : 50조 492억원
    - (국비 37조 5,411억원, 지방비 5조 2,724억원, 민자 7조 2,357억원)
  - 9개 핵심사업 : 약 39조원 / 27개 연계사업 : 약11조원

[표 3] 한국의 녹색뉴딜 사업규모와 일자리 창출효과

핵심 사업 (9개)	재정 소요(억원)			일자리(명)		
	기 반영 ( '09)	추가소요 (~ '12)	계	기 반영 ( '09)	추가소요 (~ '12)	계
합계	43,626	456,866	500,492	93,360	863,060	956,420
4대강 살리기 등	4,881	139,895	144,776	7,000	192,960	199,960
녹색 교통망 확충	18,349	78,187	96,536	25,042	113,025	138,067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250	3,467	3,717	816	2,304	3,120
우수유출시설, 중소댐	1,845	7,577	9,422	3,063	13,069	16,132
그린카 및 청정에너지보급	3,209	17,318	20,527	1,643	12,705	14,348
폐기물자원 재활용	506	8,794	9,300	2,377	13,819	16,196
녹색 숲 가꾸기	3,131	21,043	24,174	22,498	148,204	170,702
그린홈, 그린스쿨 사업	-	80,500	80,500	-	133,630	133,630
Eco River 조성 등	52	4,786	4,838	393	10,396	10,789

자료 : 기획재정부, 2009,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New Deal 사업추진방안

- 기대효과 : 총 96만개 일자리 창출
  - 기간별 일자리 창출 효과 : 2009년 14만 명, 2010년 26만 명, 2011년 30만 명, 2012년 26만 명
  - 사업별 일자리 창출 효과 : 9개 핵심사업 - 69만개, 27개 연계사업 - 27만개
  - 청년 일자리(15~29세) : 2009년~2012년 4대강 살리기, 산림바이오매스사업 등을 중심으로 총 10만개 창출
  - 각 부처별로 계획된 녹색사업을 통합 및 연계하여 분야별 중복 투자 방지



2) 녹색성장 관련 정책

- 신성장동력 육성방안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 지식경제부)
  -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발굴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녹색기술산업 (6)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첨단융합산업 (6)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식품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5)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 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융합관광

주 :    - 지경부 주관 및 공동주관 신성장동력

- 시기별 발전전략 제시

단기 (3~5년 성장동력화)	중기 (5~8년 성장동력화)	장기 (10년 내외 성장동력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신재생(조력·폐자원)</li><li>· 방송통신융합산업</li><li>· IT융합시스템</li><li>· 글로벌 헬스케어</li><li>· MICE · 관광</li><li>· 첨단 그린도시</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신재생(태양·연료전지)</li><li>· 고도 물처리</li><li>· 탄소저감에너지(원전플랜트)</li><li>· 고부가 식품산업</li><li>· LED 응용</li><li>· 글로벌 교육서비스</li><li>· 녹색금융</li><li>· 콘텐츠·SW</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신재생(해양바이오연료)</li><li>· 탄소저감에너지(CO2회수 활용)</li><li>· 그린수송시스템</li><li>· 로봇 응용</li><li>· 신소재· 나노</li><li>·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응용 기술개발</li><li>· 제도개선·투자환경 조성</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핵심기술 선점</li><li>· 시장창출 등</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초원천기술 확보</li><li>· 인력양성 등</li></ul>

- 녹색성장 추진전략 (에너지부문, 지식경제부)
  - 에너지 저소비 경제 · 사회구조 정착
    - 산업, 수송, 건물 등 분야별 에너지효율 개선대책 추진 : 중소기업 대상 무료 에너지 진단, 중장기 연비개선 로드맵 수립, 건물 에너지소비 효율 등급제도 적용대상 확대,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 도입

- 저탄소 생활기반 구축 : 서머타임 도입,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및 로드맵 수립
- 청정에너지 비중 확대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그린홈 보급 중장기 마스터플랜 및 그린홈 보급, 에너지 저소비형 그린홈 모델하우스 개관, 국산 풍력 보급 등
  - 원자력 비중 확대 : 발전소 주변지역 개선방안 마련
- 그린에너지산업 육성
  - 그린에너지 전략적 기술개발 확대
  - 2012년 글로벌 수출기업 15개 육성
- 녹색성장 기반 구축
  - 제도개선 및 추진체계 구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른 추진체계 정비 등
  - 기후변화 대응 역량 제고 : 국내기업 온실가스 감축활동 지원 확대, 국내 탄소시장의 배출권 거래기반 마련, 포스트 교토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

### 3) 녹색뉴딜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논점

- 정부의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녹색성장 개념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제시하고 있는 녹색뉴딜사업의 실체가 모호함 : “녹색”보다 “성장”을 위한 것<sup>7)</sup>
  - 녹색성장 개념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신성장동력으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인데, 사업내용은 인프라 확충사업인 SOC 사업에 크게 치중되어 있음
  - SOC 사업인 4대강 살리기 및 주변정비사업, 녹색 교통망 구축, 대체수자원 확보 및 친환경 중소담 건설 등에 전체 사업비의 62%인 31조원 투자
  - 그에 반해 실질적인 녹색산업이라 할 수 있는 그린카 및 청정에너지 보급, 국가 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등의 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3조원에 불과
  - 지금은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 : 녹색성장 관련 신성장동력 정책은 별도로 제시하고 있음

7) 녹색뉴딜정책에서 제시하는 사업은 물론 정부에서 추진하는 녹색성장 관련정책도 경제성장을 위한 사업에 치중하고 있어 생활습관 및 인식, 산업기반의 변화까지 이끌어내기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있음.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생활 전 분야의 시스템이 바뀌는 전방위적 접근이 요구됨. 즉, 친환경 SOC 구축, 친환경 상품 및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먼저 국민의식과 산업, 생활 전 분야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진정한 녹색성장 개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사회가 형성될 수 있음

-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의 확대전략은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이고 미래 국토기반을 강력하게 한다는 의견도 있음. SOC 부문에 10조원을 투자하면 일자리가 19만개 정도 유발되고 약 20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음<sup>8)</sup>
- 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 대부분이 일회적이고 단순노무직임
  - 토목사업의 경우 일자리는 비정규직, 일용직 위주이며 사업이 끝나면 상실되는 일회성이 강한 일자리임. 또한 일자리의 대부분이 단순노무직이어서 고학력자의 실업률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업유발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도 있음.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 139조원의 사업비로 약 19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그중 건설업에서 63.2%, 서비스업 20.5%, 제조업 13.8%를 창출함. 또한 건설업 부문의 취업구조를 보면 단순노무직의 일자리는 16.4%에 불과하며, 관리자 및 전문직 8.7%, 준전문가 및 사무종사자 17.1%, 장비 및 기술인력 57.2% 등 다양한 직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추정<sup>9)</sup>
-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사업이 대부분이며 지역밀착형 사업 부족<sup>10)</sup>
  - 녹색사업은 대규모보다는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는 규모의 사업이 적당하다고 판단됨
  -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공간적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함. 지역별, 사업내용별 추진주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지자체, 시민단체, 주민 등의 참여를 확대·유도할 필요가 있음<sup>11)</sup>

8) 박양호, 2009,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적 국토발전 방안”, 제2회 국정과제 세미나 일자리 창출과 녹색성장 전략 추진을 위한 대토론회,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

9) 윤영선·안흥기, 2009, “4대강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방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국토전략 심포지엄, 국토연구원 대강당

10) 사업비와 사업 내용을 볼 때 대부분의 사업추진주체가 중앙정부에 치중되어 있음. 유럽의 경우 1990년대 뉴딜프로젝트 추진 시 NGO와 노동조합을 주요한 주체로 하였으며, 미국에서도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WAP)”을 추진하면서 CBO(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를 주요 주체로 설정하고 NGO와 적극 협조 (WAP 사업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켄 데이비스(Kenneth Davis)는 2006년 12월 6일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화와 일자리 창출” 국제워크숍에 참석하여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되고 수혜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현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의 NGO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함)

11)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녹색뉴딜사업은 중앙정부와 일부 기업만으로 달성할 수 없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업, 시민단체, 개인이 함께 추진해야 달성 가능함

- 녹색성장 정책을 이끌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체에너지원 개발, 신기술 개발, 생태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최적 모델 개발 등 중앙차원에서 추진할 사업이 있고, 또 지역차원에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추진할 사업이 있음. 녹색성장 초기에 개념의 전파, 그리고 다양한 사업발굴을 통한 선제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시점임
- 관련 제도 및 계획 기반 마련, 향후 구체적인 효과 측정을 위한 모니터링 계획 미비
  -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고 사업 추진 이후 사업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마련되지 못함
  - 영국, 프랑스의 경우 녹색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관련 제도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국내에서도 1월 15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발의하였음. 다양한 의견수렴과 참여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의 녹색성장을 위한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녹색뉴딜사업 관련 제도 및 계획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그 외에 환경규제 완화, 농촌에 대한 고려 미흡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
  - 녹색뉴딜사업은 녹색을 강조하는 환경친화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해제 등 환경규제 완화라는 상반된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유럽과 미국의 경험에 의하면 녹색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농업 및 농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에 대한 고려가 없음<sup>12)</sup>
  - 국가비전으로 제시된 녹색성장정책에 대한 '진정성' 문제 대두

12) 한국환경회의, 2009, 'MB(이명박) 정부의 녹색 뉴딜 비판과 대안', 녹색뉴딜사업과 녹색성장기본법 진단 토론회 발제문

### Ⅲ. 해외사례 검토 및 시사점

#### 1. 해외 녹색뉴딜정책 사례<sup>13)</sup>

##### 1) 미국

###### ○ 주요 사업 내용

- 친환경 SOC 사업 투자 : 수자원 보호, 홍수방지·환경복원, 혼잡 방지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통근시설 개선 등
- 녹색산업 : 녹색기술 개발,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화, 서민주택의 냉난방 설비 지원 등
- 청정에너지, 그린카·그린홈 등 개발 : 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및 핵심기술 사용화 투자 확대, 저탄소 연료기준 설정으로 민간부문의 기술투자 와 혁신 유도 등

###### ○ 총 투입예산 : 2천 330억 달러

- 친환경 SOC 사업 투자 : 총 290억 달러 (수자원 보호, 홍수방지·환경복원 190억 달러, 혼잡 방지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통근시설 개선 100억 달러 등)
- 녹색산업 : 총 540억 달러 (녹색기술 개발 320억 달러,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화 160억 달러, 서민주택의 냉난방 설비 지원 60억 달러 등)
- 청정에너지, 그린카·그린홈 등 개발 : 1,500억 달러

###### ○ 투자기간

- 친환경 SOC 사업, 녹색산업 : 2009년 ~ 2010년, 830억 달러 투자
- 청정에너지, 그린카·그린홈 등 개발 : 2009 ~ 2018년, 1,500억 달러 투자

###### ○ 기대효과

- 청정에너지, 그린카·그린홈 등 개발로 2009년 ~ 2018년 중 500만개 고소득 일자리 창출

13) 삼성경제연구소, 2009, 녹색뉴딜사업의 재조명, CEO Information 제691호와 관련기사 참조

- 2030년까지 연방정부 소비전력의 30% 이상, 2025년까지 미국 내 전력소비의 2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

## 2) 영국

### ○ 주요 사업 내용

- 친환경 SOC 사업 : 철도노선 확대, 노후학교 및 병원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 녹색산업 : 풍력 및 조력발전 (2020년까지 7천기의 대형 풍력발전기 설치), 전기자동차 개발 등
- 정책인프라 구축 : 기후변화법 제정(2008. 10) 등

### ○ 총 투입예산 : 100억 파운드

### ○ 투자기간 : 2008년 ~ 2020년

### ○ 기대효과

- 일자리 16만개 창출 : 노후학교 및 병원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으로 3만개 일자리 창출 등

## 3) 프랑스

### ○ 주요 사업 내용

- 세계 최초로 녹색뉴딜 시작, 2007년 10월 녹색뉴딜 발표
- TGV 2천km 및 파리 외곽 전철 1천 500km 신설, 내륙수로 건설
- 기존 건물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바꾸는 녹색건설 사업
-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주택개량 사업
- 에너지 절약형 학교 및 병원 신·개축 등

- 탄소저감기술 개발
- 2009년 1월 환경보호법(National Engagement for the Environment) 입안
- 총 투입예산 : 4000억 유로
  - TGV 2천km 및 파리 외곽 전철 1천 500km 신설, 내륙수로 건설 등 : 970억 유로
  - 기존 건물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바꾸는 녹색건설 사업 : 2천 50억 유로
  -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주택개량 사업 등 : 105억 유로
  - 에너지 절약형 학교 및 병원 신개축 등 : 65억 유로
  - 2008년 ~ 2011년 탄소저감기술 개발 : 10억 유로
- 투자기간 : 2007년 ~ 2020년
  - 탄소저감기술 개발 : 2008년 ~ 2011년
- 기대효과 : 50만개 일자리 창출

#### 4) 일본

- 주요 사업 내용
  - 2008년 6월 저탄소사회를 향한 대표적 비전인 '후쿠다 비전' 선포
  - 발전·송신, 교통 등 분야에서 에너지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제시
  - 녹색산업 투자에 대한 무이자 융자 등을 통해 기업투자를 유도
  - 전기자동차 등 차세대 친환경제품에 대한 구매 장려 등을 통해 신수요 창출
  - 에너지 효율 제품 사용을 증진시키고 친환경 분야 투자 확대
- 총 투입예산 : 100조엔
- 투자기간 : 2009년 ~ 2015년
- 기대효과 : 220만개의 일자리 창출

[표 4] 세계 주요국의 녹색뉴딜정책 비교

국가	주요 사업 내용	투자규모	투자기간	기대효과 (일자리 창출)
미국	· 수자원 보호, 홍수방지·환경복원, 혼잡 방지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통근시설 개선 · 녹색기술 개발,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화, 서민 주택의 냉난방 설비 지원 등 · 청정에너지, 그린카, 그린홈 등 개발	약 364조원 2,330억 달러	2009~2018 (10년간)	500만개
영국	· 철도노선 확대, 노후학교 및 병원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 풍력 및 조력발전(2020년 까지 7천기의 대형 풍력발전기 설치), 전기자동차 개발	약 22조원 100억 파운드	2008~2020 (13년간)	16만개
프랑스	· TGV 2천km 및 파리 외곽 전철 1천 500km 신설, 내륙수로 건설 · 기존 건물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바꾸는 녹색 건설 사업 ·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주택개량 사업 · 에너지 절약형 학교 및 병원 신개축 등 · 탄소저감기술 개발	약 789조원 4,000억 유로	2007~2020 (14년간)	50만개
일본	· 발전·송신, 교통 등 분야에서 에너지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개발 · 전기자동차 등 차세대 친환경제품에 대한 구매 장려 등을 통해 신수요 창출 · 에너지 효율 제품 사용을 증진시키고, 친환경 분야 투자 확대	약 1,570조원 100조엔	2009~2015 (7년간)	220만개
한국	· 9개 핵심사업 27개 연계사업 · 주요사업:4대 강 살리기 `녹색교통망 구축, 녹색국가 정보인프라 구축	50조원	2009~2012 (4년간)	96만개

주 : 환율은 2009년 3월 5일 현재 기준

2. 1930-1990년대 경기부양대책 해외사례

1)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과 뉴딜정책

- 1929년에 시작된 대공황으로 미국의 실업률은 1929년 3.2%에서 1933년 24.9%로 급격히 상승



- 1933년 3월에 취임한 루즈벨트 대통령은 구제(Relief), 회복(Recovery), 개혁(Reform)의 3R을 기조로 하는 뉴딜정책 제창
  - 구체적으로 전국산업부흥법(NIRA)의 제정을 통한 고용구조 개선, 실업자 구제를 위한 연방긴급구제청(FERA)의 창설, 테네시강 유역 종합개발사업 시행, 공공투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진흥청(WPA) 설치, 청년고용을 위한 시민자원보전단(CCC)과 전미청년국(NYA) 창설, 퇴직자연금과 실업보험의 근거법률인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제정 등 추진

〈1933 뉴딜정책 중 미국의 Civilian Conservation Corps(CCC, 1933-1942)〉

- CCC의 설립
  - 1933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첫 100일 동안 그는 뉴딜이라고 불리는 여러 개의 조치를 감행하였는데, 이중 하나가 Civilian Conservation Corps로 잘 알려진 ‘Emergency Conservation Work Act’의 시행
  - 일자리가 없는 젊은이들을 모집하여 일종의 평화시의 군대로 조직하여 미국 자연자원의 파괴와 부식에 대항하여 싸우도록 한 것임
- CCC 프로그램의 내용
  - 계약조건 : 계약기간은 6개월(재계약 가능), 월급 \$30. 이중 \$25 수표는 의무적으로 가족에게 송부
  - 다양한 프로젝트 추진 및 문맹자 교육 실시
- 추진 프로젝트
  - 재삼림화(Reforestation)와 야생 식생보호, 삼림휴양
  - 산불 방지 및 진화 작업
  - 농업용 배수체계 건설
  - 긴급재해 대처
  - 토양 손실 방지 사업
- CCC의 효과
  - CCC는 뉴딜 정책들 중에 가장 성공적인 것의 하나로 평가
  - CCC프로그램을 통해 1933년부터 1942년까지 대략 30억 그루의 나무를 전국에 걸쳐 심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것은 공유림과 사유림을 막론하고 미국 역사상 달성된 재삼림화의 약 절반정도에 해당
  - 1933~1941년 사이 3,000,000명이 CCC에서 일하였으며 대공황 이후 고용시장에서도 고용주들이 CCC 출신들을 선호
  - 기타효과 : 고용창출효과 372만 명, 부양가족에게 돌아간 총금액 6.6억 달러, 도로 건설 총길이 12만 5천 마일, 트레일 건설 총길이 1만 3천 마일, 재삼림화된 총면적 81만 4천 에이커(acre), 물길 및 호수둑 보호 총면적 1억 5천만 스퀘어 야드(square yards), 개발된 주립공원수 800개, 공공 야영장 개발 5만 2천 에이커, 재건된 역사적 구조물 3천 980개 등

## 2) 1990년대 일본의 10년 불황과 일자리대책

- 1991년 중반부터 시작된 일본의 10년 불황은 1986년 12월부터 1991년 2월까지 계속된 버블경기의 붕괴로 촉발
  - 자산가치의 급격한 하락에 따른 소비 감소와 더불어 금융기관의 불량채권 문제가 악화되면서 일본의 실물경제가 침체국면에 들어섬
  - 실업률은 1992년 2.2%에서 1995년 3.2%, 1998년 4.1%, 2002년 5.4%로 지속적 악화
- 불황 극복을 위하여 일본은 1992~2000년 동안 총 10차례의 종합 또는 긴급경제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수시로 긴급고용대책 발표
  - 10차례의 경제대책을 통하여 발표된 재정투자 총액은 130.4조 엔에 달함
  - 일자리 창출방안은 공공투자를 통한 사회자본의 정비를 비롯하여, 신산업 육성·지원 및 신규개업 지원, 신 사업기회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고용의 유지·안정을 위한 각종 보조금 강화, 중·노년층 실업자 고용대책, 청년 고용 대책, 인재의 지방취업 지원, 임시적·단기적 고용기회 발굴, 능력개발 대책, 노동력 수급의 미스매치 해소, 비영리단체(NPO) 활용 방안 등

## 3. 시사점

- 해외의 녹색뉴딜사업은 크게 SOC 사업과 녹색국토 조성사업이 두 축을 이루고 있음
  - 주요 SOC 사업은 철도와 수자원 관련 사업으로 철도노선 확대, 철로 신설, 수로 건설, 수자원 보호 및 홍수 방지 등의 사업이 포함됨
  - 녹색산업으로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제고, 풍력 및 조력발전 관련 사업 등이 있으며, 특히 에너지 효율 관련 기술 및 제품 개발, 신재생에너지 개발, 탄소저감기술 개발 등이 주요 사업임

- 녹색뉴딜사업에 있어서 기존의 개발사업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적인 SOC 사업이나 기술개발이 아닌 친환경적 SOC, 친환경적 기술개발, 에너지 효율화 등 녹색을 강조한 사업이라는 것임
- 영국과 프랑스는 기후변화법, 환경보호법 등 환경관련 법안을 입안 또는 제정하여 녹색뉴딜사업에 있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1933년에 실시한 미국의 CCC 프로젝트는 청년을 대상으로 훼손된 자연을 복구하고, 관련된 도로 등 기반시설, 레크리에이션 시설 등의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고용창출과 미국을 젊어질 청년들에게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 주었다는데 의의가 있음
- 공공투자의 대상으로 미래 성장산업에 집중 투자하여, 경기 회복과 동시에 장기적 국가발전 기반 구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불황 극복을 위한 공공투자는 신속하게 진행되며, 회복시까지 지속적인 투자 필요

## IV. 녹색뉴딜정책 성공을 위한 과제

### 1.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과 극대화

- 사업의 특성과 현황을 바탕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사업을 선택하여 성공적 사례(Best Practice)를 제시하도록 함 : 단기간 효과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녹색성장을 위해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
  - 재생에너지 개발 및 친환경 사업들은 아직 초기단계이며 이 사업으로 고용창출을 얻기까지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임
  - 사업시행 후 바로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은 토목사업이 있으나 이 사업들은 고용이 사업진행시까지만 유지된다는 단점이 있음
  - 이러한 사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기별로 단기적으로 집중 투자해야 할 사업과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투자해야 할 사업을 구분해야 할 것임
  - 또한 사업의 투자비용 대비 효과비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선택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음
- 블루오션전략으로 차별화될 수 있는 기술개발 및 시장 개척
  - 친환경 산업과 관련된 소재와 기술 분야는 이미 선진국과 많은 격차가 벌어져 있음
  - 산업안전 및 보건, 지질, 해양, 환경정화 기술 등은 선진국의 30%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태양광, 풍력 관련 소재나 부품의 수입의존도는 각각 75%, 99.6%에 달하고 있음
  - 환경친화적 사업으로 경제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입의존도를 줄이고 국내의 차별화된 기술을 개발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한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R&D에 집중적이며 지속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음
  - 아직 미개발된 신기술을 개발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음
- 선택과 집중에 의하여 실시되는 사업은 철저한 사전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적 신뢰를 이끌어 내야 함
  - 현 국가의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필요성을 도출한 사업은 당연히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음

- 현재 조사되고 있는 통계분야 뿐만 아니라 녹색성장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면밀한 조사와 사업의 수혜자가 될 국민의 의견수렴, 국민의식 조사 등이 필요함
-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위한 상품 및 기술 기준 마련 등 친환경적 기술, 신기술 등 새롭게 개발되어야 할 기술과 상품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해 기초정보 및 기반 구축 등을 감안한 구체적이고 신축적인 사업계획 작성

## 2. 국민 의식개선 및 녹색생활 시스템 마련

-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 의식 개선 및 녹색 생활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 지금까지 경제성장 및 생활의 편의만을 추구해 왔다면 이제는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질을 동반하면서 경제적 효과까지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 녹색뉴딜사업임
  - 정부, 기업 또는 각종 매스컴을 통해 녹색성장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홍보 방안 마련
  - 녹색성장이 국민생활과 연결되어 실천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제시
  - 교육기관을 통해 환경오염 및 친환경적 생활습관 등에 대한 교육
  - 마을단위의 소규모 녹색운동 추진 : 나무심기, 마을 숲 조성 등을 통해 이산화탄소 흡수율 강화, 쓰레기 배출 감소,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 녹색마을 선정을 위한 콘테스트 및 녹색마을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 공공시설 리모델링 사업 추진
  - 마을센터를 조성하여 지역소단위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여 사회적 자본 확충 여건 조성
  - 학교 신개축, 학교 시설 재생을 통하여 학교 시설을 재정비함. 학생을 위한 교육여건 제고는 물론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주민에게 다양한 활동 환경 제공

○ 도시재생사업과 일자리 창출

- 공공주도로 도시재생사업을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추진할 경우 민간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창업, 경제회복 촉진에 기여할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임
- 도시재생사업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마련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됨
-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 저소득층 밀집 불량주거지 생활환경개선사업,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 직업훈련시설 설치
- 소생활권 단위의 문화시설 설치사업, 지역단위 자원재생사업, 소하천 정비사업의 확대, 재래시장 재생사업 활성화, 저탄소 녹색도시로의 재생사업
-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칭 “도시재생지원법” 조속 마련

○ 국민의 실제 삶에서 녹색화를 느낄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

- 최근에 일부 업체에서 제작과정, 제품소재, 기업 비전 등을 친환경 컨셉에 맞추는 변화가 일고 있음
- 친환경적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환경마크 인증제 실시 확대 및 친환경 제품에 대한 국민소비 권장을 위한 홍보 활동 등 필요
- 현재 친환경상품구매촉진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물품 구매할 때 일정 비율 친환경 인증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 친환경제품 구입, 친환경시스템 도입 등에 대한 제도적 유도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주민 삶과 밀접한 건물옥상녹화, 생태놀이터, 그린홈 개발 등의 사업 추진

### 3. 녹색성장을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

○ 녹색기술 개발을 통해 환경 개선 및 경제성장 도모

- 정부는 녹색성장을 위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으로 융합신산업, 에너지·환경, 지식서비스, New IT, 바이오, 수송시스템 등 6개 분야를 선정하고 2018년까지 세계시장 점유 목표안을 제시하였음

- 2008년 현재 New IT와 수송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분야는 모두 세계시장 점유율 10% 이하에 머무르고 있음
  - 이외 기후사업<sup>14)</sup>, 자원·에너지사업 등도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이러한 녹색기술 및 산업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해 녹색성장을 위한 저력을 만들어야 할 것임
  - 녹색기술을 개발하여 상용화 투자가 연결될 수 있도록 “중장기 단계별 기술 및 투자로드맵” 작성 등 기술개발 전략 마련<sup>15)</sup>
- 녹색기술과 기존 산업간의 관계 재정립
- 녹색기술 개발은 기술발달만으로 온실가스 배출저감이나 신성장동력화가 되기 어려움
  - 녹색기술개발과 함께 기존 산업구조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어야 함. 즉, 기술개발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경제성장을 위한 기존산업이 계속 추진되면 개발된 기술을 사용할 대상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 기술의 효율성은 감소되기 때문임
  - 따라서 개발된 기술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기존의 산업형태를 녹색성장에 적합한 구조로 개선하기 위한 전환이 병행적으로 진행
- 녹색산업단지 재생과 일자리 창출
- 노후산업단지들은 좋은 입지여건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재정비하여 기업이 보다 쉽게 양질의 생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단지 재생이 일자리 창출의 기반 가능
  - 기존 산업단지의 재생은 구인과 구직 간 괴리를 완화하는데도 기여 가능
  - 노후화된 산업단지 시설을 정비하고, 단지 확장, 주차장과 도로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생산현장에서 느끼는 애로를 완화하고, 기업생산환경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효과 배증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재생 촉진방안 : 산업단지 재생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의 정비,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 산업단지 내 서비스업 입지 기준의 완화

14) 기후산업으로 그린카, 기후변화산업, 기상산업이 있음. 환경부의 녹색성장 사이트(<http://www.greengrowth.go.kr>)

15) KDI 외, 2008, 녹색성장 : 국가성장전략의 모색, 회의자료

## 4. SW 및 공간정보산업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장기 고용창출 효과를 감안하여 SW(software) 사업 중심으로 녹색뉴딜사업 추진<sup>16)</sup>
  - 토목 및 건설사업의 경우 일자리가 일시적이며, 일자리 창출 효과도 10억원 당 건설업 17인, 제조업 10인으로, SW사업의 24인에 비해 적은 효과를 나타냄
  - SW 산업은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쓰는 산업으로서 주로 국민생활과 직결된 교육, 의료, 행정서비스가 대상이 됨
  - SW 사업은 서비스 또는 시스템을 향상시키기 위해 첨단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구성되며, 여기에 의료,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산업분야에서 SW부문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서 SW 산업의 뉴딜정책추진은 기존 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음
  - SW산업은 다른 산업과 융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임
- 공간정보<sup>17)</sup>를 생산·가공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복합 활용 또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공간정보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추진<sup>18)</sup>

### 16) SW 뉴딜사업(안)

- 재난 상습지역 관리 시스템 구축(4대강 포함 가능) : 상습적으로 범람하는 하천의 수위 등에 대한 실시간 감시 시스템 구축, 산사태 지역의 유형 구분 및 유형별 관리 사업, 도시 내 침수지역에 대한 하수관거 교체 사업, 무선인식, 센서 등을 이용한 유역 보전 및 시설물 관리
-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 거래제도 실시를 위한 기반 구축 : 지역별, 기업유형별 온실가스 배출 추계를 위한 통계 기반 구축, 온실가스 측정을 위한 배출계수 개발 등 측정시스템 개발,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ing) 표기를 위한 기반 구축 : 제품별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을 표시하는 것
- 지역자원 지역 유통 기반 조성 : 지역특산물 등 주요 농축수산물 유통 시스템 구축, 지역자원 지역우선 소비 체계 마련을 위한 지역유통 시스템 구축
- 지역별 신재생에너지원 개발 및 시범사업 : 지역별 활용 또는 개발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원 발굴 사업, 지역별 지역자원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사업
- 유비쿼터스 사회기반 및 교육 시스템 구축 : 유비쿼터스 사회 기반 시설인 와이브로 + RFID 전국망 구축, 디지털 교과서 및 멀티미디어 교재 작성 + 교과과정별 학습 과정 개발 및 실시
- 국토정보 통합 인프라 구축 : 각 부처별 작성된 국토 관련 정보 통합을 위한 기반 마련, 부처별 정보 네트워크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유비쿼터스 - 국민건강 점검 시스템 구축(헬스케어 사업) : 국민 건강 기록을 정보화 하는 사업 =>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보험 제도와 연계 :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함

### 17) 특정 지점 또는 지형지물 등의 위치와 속성에 관한 정보

- 18) 공간정보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보화근로사업'을 추진하여 고급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국가의 공간정보인프라를 확충한 경험이 있음. 기 수행한 공간정보사업(GIS사업)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공간정보사업의 취업유발 효과는 10억원 당 26.2명으로 추산됨. 공간정보사업의 취업유발효과는 유사업종인 컴퓨터관련서비스(17.7), 소프트웨어개발공급(16.3)보다 높으며, 주택건설(16.6)보다 높음



- 녹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해야 함
  - 녹색산업분야의 기초 R&D 지원 및 대학에 에너지 및 녹색 관련 학과 및 교과목 설립

## 5. 사람과 환경을 중시하는 녹색지향의 사업 추진

- 기존의 SOC 사업과 차별화된 환경과 경관을 고려하는 사업 추진
  - 정부에서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여론은 과거의 토목·건설사업을 답습하고 있다 우려하고 있음
  - 정부는 가능한 빨리 세부계획안을 작성하여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토록 해야 함. 뉴딜사업 성패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관건임
  - 선진국에서도 경기부양을 위한 녹색뉴딜사업으로 수자원 보호, 홍수방지·환경복원, 철도노선 개선 확대, 내륙수로 건설 등 SOC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어떠한 내용과 계획을 갖고 추진하느냐가 중요함. 자연환경과 경관, 그리고 하천생태계를 살리는 차원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 신규 개발사업 보다는 기존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음. 유럽과 캐나다의 경우 댐건설 및 수자원 추가 확보 보다는 누수율 감소를 위한 누수탐지반 고용, 관로개선사업 추진 등으로 더 큰 고용효과를 보았다고 함<sup>19)</sup>
- 석유산업에 투자할 때 보다 녹색산업에 투자했을 때 4배 가량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함<sup>20)</sup>
  - 미국의 메사추세츠 대학교 정치경제연구소의 로버트 폴린 소장팀이 작성한 ‘녹색회복(Green Recovery)’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정부가 녹색산업에 2년간 1천억 달러를 투자했을 때 2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함. 이러한 일자리 창출 수치는 미국의 녹색산업발전 정도와 경제력을 바탕으로 나온 수치일 것임. 하지만 녹색산업이 일자리 창출의 유망산업임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 없음

19) 한국환경회의, 2009, 전계자료, 댐 건설보다 수요관리를 하는 것이 30%이상 고용효과가 크다고 보고됨

20) 미래기획위원회, 2009, 녹색성장의 길

- 녹색산업 일자리 유형으로는 풍력, 태양광, 바이오 화학생물연료, 대기오염, 폐기물 관리, 물 처리 및 폐수처리 등으로 단순일용직에서 기술자까지 50여개의 다양한 직종을 제시하고 있음<sup>21)</sup>
  - 국내의 녹색뉴딜정책에 실질적인 녹색산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음. 해외연구사례 및 국내 녹색산업 관련 연구 등을 통해서 녹색산업에 대한 계획과 투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과거 뉴딜정책은 단순히 국가의 경제력 제고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소외계층을 고려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음
-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의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는 것은 경기부양보다 사회보장제도 확립 등 구제정책에 많은 성과를 올린 것이라 할 수 있음
  -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녹색뉴딜정책 또한 단순히 국가적 차원의 경제 회생만이 아닌 서민생활의 안정, 소외된 계층에 대한 고려 내용이 담겨져야 함
  - 저소득층 등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생활환경개선, 에너지 복지 강화 등의 정책이 필요함
- 국가의 3요소 중 하나는 국민이며, 그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생존을 지키는 것이기도 함
- 역사적으로 국가의 생존을 위협했던 것 중에 하나는 질병이었음. 특히 전염병과 같은 질병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멸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음
  - 지금은 과거와 같은 전염병으로 국가가 멸망하는 일은 없어졌으나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이 새로운 국민건강의 위협요소가 되었음
  - 기후변화는 물 공급 및 수질, 식량, 생태계 등에 변화를 가져와 직간접적으로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기온상승에 따른 '질병' 발생 가능성, 변화되는 환경에서 모기 등 해충의 확산에 의한 질병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sup>22)</sup>
  -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환경훼손에 대한 근본적인 환경대책과 함께 직접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연관되는 각종 21세기형 환경질병 등에 대한 대안 마련내용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임

21) 미래기획위원회, 2009, 녹색성장의 길

22) 최영국, 2008, 녹색성장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국토가치 창출과 국토관리 전략, 국토연구원 개원30주년 기념세미나 발표자료

## 6. 녹색국토공간 형성 사업 추진

- 전 국토의 녹색화 사업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의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 조성을 도모
  - 농경지 가운데 경작하지 않고 있는 한계농지나 마을 주변의 농지와 나대지를 활용하여 숲 조성. 경제림으로 조성하고 또한 미래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조림계획에 의하여 숲을 조성하도록 함
  - 대신 도시주변 일부 산지를 활용하여 산림 내 작은 주거단지를 개발하여 우리나라 토지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을 다각도로 활용하도록 함. 이때 용적률, 건축물높이, 색상 및 형태 등에 대한 개발지침을 사전에 마련하여 자연과 조화된 산림마을 단지가 조성되도록 함
  - 전국토를 대상으로 녹색길을 조성하도록 함. 기존 마을길, 산길 등을 있는 그대로 복원하여 국민들의 휴식과 건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도시주변의 녹색길은 산책뿐만 아니라 체육활동(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등) 장소로 조성
- 녹색성장의 실체로서 압축적 도시 형태의 첨단생태도시 시범사업을 추진
  - 지금의 각종 기술력을 동원하여 녹색성장이라는 개념 하에 미래지향적이며 친환경적인 첨단생태도시 조성
  - 향후 집중 투자해야 할 기술과 발전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샘플이 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함. 시범도시를 조성하여 미래에 요구될 도시의 방향 설정 및 부족한 기술, 투자해야 할 부분에 대한 전략을 세울 수 있음
  - 시범도시에서의 주민들의 반응, 생활여건 변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 탄소제로도시를 지향하여 건설된 첨단생태도시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결과는 추후 다른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중요한 부분임

## 7. 지자체 및 시민단체, 국민참여 지원 및 확대

- 지역적 개성이 없는 개발사업이 아닌 지역정체성을 고려한, 지역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사업 추진

- 지방이 수도권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것은 문화적 자산과 훼손되지 않은 환경 자원임. 따라서 이러한 지역고유의 자원에서 그 가치를 찾아 지역의 브랜드를 만들고, 고용이 창출되고, 교육·문화·안전·환경 등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함<sup>23)</sup>
  -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작성한 사업이 그대로 지자체에 하달되는 방식이 아닌 실질적인 계획내용에서 추진까지 지역적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가 주체가 되고, 또한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사회 전반의 다양한 전문가 및 단체들과의 협력 및 적극적인 참여방안 마련
- 선진국에서는 사업의 특성 또는 대상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기 위해 그에 맞는 시민단체 또는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거나 사업주체로 삼기도 함<sup>24)</sup>
  - 녹색성장은 국가적 비전으로, 일부 정부단체나 기관에서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가능한 많은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참여를 통해서 국민이 함께 이루어나가는 성장목표가 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형식적인 회의참여가 아닌 사업 계획부터 진행, 모니터링까지 직접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그들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지역의 여러 사항들에 대해 반영하고 그것을 모니터링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의식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합의는 녹색성장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 잘 발달된 인터넷 네트워크를 적절히 활용하여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의견수렴만이 아닌 실제 의견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고,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까지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또한 지역별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에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

23) 최영국, 2008, 전계자료

24) 유럽의 경우 1990년대 뉴딜프로젝트 추진시 NGO와 노동조합을 주요한 주체로 하였으며, 미국에서도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WAP)”을 추진하면서 NGO와 적극 협조

- 일자리 창출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과의 협력 및 참여 중요
  -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여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경제회복을 달성하려면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 간 파트너십이 필수 조건임
  - 영국사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국정부가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정부와 기업의 협력임. 다보스포럼에서 영국의 브라운 총리는 저탄소 경제 투자를 유도하고 미래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글로벌 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업의 역할을 강조
  - 일부 기업에서는 이미 녹색성장을 기업모토로 내세우거나 친환경적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녹색성장에 동참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세제혜택, 제도개선 등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및 정부와 기업 간 의견교환의 장 마련 등 필요

## 8. 외국사례의 철저한 분석을 통한 벤치마킹 및 추진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 선진국의 정책, 제도 및 계획 등의 내용을 벤치마킹할 때, 국내의 여러 여건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실정에 맞게 적용해야 함
  - 환경, 에너지, 국토개발에 대한 국민의식 수준과 국가적 현황을 측정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정책 추진
  - 같은 정책 또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국가의 경제수준, 국민의식 수준 등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수준 및 국민성을 고려하여 외국에서 진행하는 사례들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적용해야 함
  - 선진국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규제완화를 진행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방법과 수준으로 규제완화를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따라서 어떠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가의 현 상황, 실제 사업에 참여하게 될 정부, 지자체, 기업, 국민의 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

- 다양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조직 구성도 요구됨
  - 녹색뉴딜정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모니터링할 조직을 구성하여, 각 부처별로 추진되는 사업과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중복여부, 사업조정, 부처 간 또는 지자체 간 협력 및 지원 부분에 대한 연결고리 역할, 사업완료 후의 효과 분석과 연계 사업 발굴 등을 다루도록 함
  - 사업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모니터링 부문에 대한 관련내용, 운영방안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모니터링 조직 구성을 할 때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함. 예를 들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되는 지원 그룹도 필요할 것임

## V. 맺음말

- 녹색뉴딜정책은 현재 진행 중인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녹색성장'으로 풀어가려는 정책
  - 경제 불황극복을 위해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이지만 경제회복 과정에서 에너지와 기후변화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 왜냐하면 녹색뉴딜정책은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근간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이기 때문임
  - 경제회복도 중요하지만 전 인류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못한다면 지금 겪고 있는 경제위기를 훨씬 뛰어 넘는 경제적 재난을 면치 못할 것임
  - 녹색뉴딜정책은 녹색성장 추진을 성공으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함
- 녹색뉴딜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요구됨
  - 각종 사업 추진할 때 면밀한 조사와 분석,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함
  -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함
  - 국민의 녹색성장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과 주민들의 실생활과 연관된 녹색사업을 우선 실천할 필요가 있음
  - 중앙에서 무조건 이끌면 따라와 주길 바라기 보다는 여러 단체와 지자체, 기업,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가능한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책을 진행해야 함
- 녹색뉴딜정책의 근간이 되는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국가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
  - 녹색성장이라는 목표는 몇 개의 녹색사업 추진으로 이룰 수 없음

- 국가 내 산업구조, 기업, 정부 내의 시스템, 도시 시스템 등 국가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녹색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져 가야 함
- 개인이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 소규모의 단체(또는 사업체)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국가가 바뀔 수 있음
- 기존 국가 시스템에서의 환경오염, 극심한 빈부격차, 지역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자연이 건강하고, 사회가 안전하며, 삶의 질이 향상된 지속가능한 사회가 조성되어야 함



## ◎ 참고 문헌 ◎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9. 제2회 국정과제 세미나 : 일자리 창출과 녹색성장 전략 추진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2. 국토연구원. 2008. 국토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3. 국토연구원. 200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국토전략 심포지엄 자료집
4. 기획재정부 외. 2009.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New Deal 사업 추진방안. 국무회의 보고자료
5. 녹색성장위원회. 2009. 경제위기 극복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녹색성장 전문가 워크숍 자료집
6. 미래기획위원회. 2009. 녹색성장의 길
7. 박양호. 2009. 3. 10.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적 국토발전 방안”. 제2회 국정과제 세미나 : 일자리창출과 녹색성장 전략 추진을 위한 대토론회.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
8. 삼성경제연구소. 2009. 2009년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전망
9. 삼성경제연구소. 2009. 녹색뉴딜사업의 재조명, CEO Information 제691호
10. 삼성지구환경연구소. 2008. 믿기 싫은 현실, 기후 대재앙
11. 윤영선·안흥기. 2009. “4대강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방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국토전략 심포지엄. 국토연구원 대강당
12. 최영국. 2008. “국토의 녹색성장 추진방안”. 창조적 국토전략 심포지엄
13. 최영국. 2008. “녹색성장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국토가치 창출과 국토관리 전략”. 국토연구원 개원30주년 기념세미나
14. 최영국. 2009. 녹색성장의 이슈와 녹색국토 추진전략, 국토 통권 327호
15. 토머스 프리드먼. 2008. 코드그린 : 뜨겁고 평평하고 봄비는 세계. 최정임·이영민 역. 21세기 북스
16. 한국개발연구원. 2008. 녹색성장 : 국가성장전략의 모색
17. 한국환경회의. 2009. “MB(이명박) 정부의 녹색 뉴딜 비판과 대안”. 녹색뉴딜사업과 녹색성장기본법 진단 토론회 발제문
18. 기후변화홍보포탈(<http://www.gihoo.or.kr/>)
19. 환경부의 녹색성장 사이트(<http://www.greengrowth.go.kr>)